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2면	법무보호위원 강원동부협의회 도의장 간담회	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본회의 개회	2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	2
KBS 춘천		강원도의회 지역상담소 설립안 상임위 통과...예산 낭비 논...	3
춘천MBC		도의회 지역 상담소, 우려 속 운영위 통과[1/3]	5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7
강원도민일보	03면	"도내 4개 기관 한정 인사청문 대상 확대해야"	7
江原日報	03면	"인사청문 기관 확대해야"	8
亞洲經濟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해야..."	9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2기 예결위원장에 이무철 선임...부위원장 박호균	10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무철 도의원	11
KBS 강릉		'전기 자동차' 화재 급증..."강원형 진압 대책 개발"[1/2]	12
KBS 춘천	온라인	'의사상자' 지원 조례 발의...위로금 최고 3천만 원	14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교육청, 특별법 3차 개정...교육 특례 발굴 속도	15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	15
인제인터넷	온라인	원통중·고등학교 청소년 명예자율방범대 창단!	16
원주 MBC		방치된 드림랜드에 치유의 숲.. 과연 이번에는?[1/2]	17
강원도민일보	01면	"사고만 나면 지자체 책임"...공직사회 피로감 심화	19
朝鮮日報	12면	피서철인데... 동해안에 상어 출몰 잇따라	20
江原日報	01면	내년 1조2천억대 발주 강원 건설업 훈풍 예고	21
江原日報	02면	내년 1조2천억대 발주 강원 건설업 훈풍 예고	22
江原日報	04면	매년 수천명 떠나는데 전담 부서 없는 강원	23
강원도민일보	07면	"춘천시 르네상스사업단 운영실태 감사 부실"	24
강원도민일보	12면	횡성군·미 유통사 손잡고 수출시장 개척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원주아카데미극장 시민 뜻 물어야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수산물 판매 어려움 심상찮아 우려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속초~고성 고속도, 동해안 대동맥의 완성이다	27

江原日報

2023 07 11 ()
12

법무보호위원 강원동부협의회 도의장 간담회 김용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동부협의회장과 허진석 수석부회장은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권혁열 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릉시민 희망음악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02

도의회 본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도의회 임시회는 12일간 열린다. 서영

江原日報

2023 07 11 ()
02

강원자치도의회 임시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1일까지 회기에 돌입했다. 박승선거자

KBS 춘천

2023 07 10 ()

강원도의회 지역상담소 설립안 상임위 통과... 예산 낭비 논란



[앵커]

강원도의회가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오늘(1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확정되면, 5년 동안 설치와 운영에 4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부에서 회의론이나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수가 찬성하고 나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각각 1개씩 설치하고, 각 상담소마다 민원상담관을 1명씩 두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는 땅이 워낙 넓은데다, 도의원은 1년의 3분의 1은 지역구를 떠나 있다보니, 시군별 민원 수렴 공간이 필요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승순/강원도의원/지역상담소 조례안 발의 : "도의회에 있어, 도민의 입법 정책의 건의나 각종 민원 등의 의견 수렴과 소통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우려를 제기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필요하다 치더라도 상담관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군의원이나 의정보니터단, 이통장, 시군청 등 다른 민원 수렴 통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담소가 도의원 개인의 사무소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화천, 양구, 고성 등 도의원이 1명뿐인 곳은 이럴 가능성이 더 큼니다.

[박윤미/강원도의원 : "결국은 그 의원님의,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개인 사무실로 비취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박관희/강원도의원 : "뭐, 공청회나 여러가지 그 조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같이 성립시켜서,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이미 공동발의자를 포함해 도의원 49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의원 20명이 이 조례안의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담소 운영을 위해선, 첫해에 11억 7천만 원, 이듬해부터는 매년 8억 6천만 원씩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담소 설치 조례안은 앞으로 도의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2023 07 10 ()

춘천MBC

도의회 지역 상담소, 우려 속 운영위 통과

◀ A N C ▶

강원도 시·군에 도의회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자는 조례가
도의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상담소가 설치되면 도의원들의
개인 사무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 가결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E N D ▶

◀ V C R ▶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도의회 지역 상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상담소와 상담관을 두
주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최승순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 I N T ▶

[최승순/강원도의원]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렴·해결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했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의원 생활을 하며
겪었던 불편한 경험들을
의원들 스스로 쏟아 냈습니다.

◀ I N T ▶

[심오섭/강원도의원]
"사실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려고 하면은
커피숍 아니고는 만날 장소가 없어요."

◀ I N T ▶

[지광천/강원도의원]
"1년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 서류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부 도의원들조차 지역 상담소가
자칫 의원 개인 사무실처럼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I N T ▶

[박윤미/강원도의원]

"양구 화천 이런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한 분만 계시잖아요.
결국은 그 의원님들의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개인 사무실로
비칠 수 있는..."

그런데 답변은 의원들 스스로
잘 운영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 I N T ▶

[최승순/강원도의원]

"누구보다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스스로 자각을 하셔서 명심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지역 상담소를 둔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단 두 곳입니다.

세종시의회 경우
상담 건수가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상담소를 폐지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
지역 상담소도 한 곳 당 지난해
월평균 상담과 민원 건수가
각각 7건과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일단 해보고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영곤/도의회 운영위원장]

"우리 강원도형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농 통합지역이어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강원도 지역마다 도의회
상담소를 설치하려면
올해 필요한 예산이 11억 원.

해마다 8억 6천만 원의 운영비도 들어
앞으로 5년 동안 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이 비용을 전부
강원도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E N D ▶
(영상취재/최정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지역상담소

백승호

江原日報

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실효성 의문” vs “민원 수렴”
21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키로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본보 지난 5일자 3면 보도)가 도의원들 간 논란 끝에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는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2시간가량 진행됐다.

도내 시·군에 도의회의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민원상담관을 위촉, 지역 민원을 신속히 수렴하겠다는 내용의 조례로, 심의 과정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와 이견이 잇따랐다.



최승순 의원



박윤미 의원



박관희 의원



이승진 의원



심영곤 의원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은 “춘천은 민원이 생기면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관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은 “의원들 동의를 얻기에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했다.

올해 도의회가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의정모니터단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한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의원들 간 이견도 있는 상황인데 심사숙고하는 과

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승순 의원은 “단순히 도의원들이 편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편리함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영곤 운영위원장은 “답소를 마련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도내 4개 기관 한정 인사청문 대상 확대해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서 강조

외국인 근로 전담부서 신설 주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현재 4개 기관 장에 한해 실시하는 도의회 인사청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10일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제진흥원은 도 위탁사업이 352억 원인 기관이고,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유일한 공기업”이라며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있는 이때, 내실있고 긍정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인사청문대상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도내 공기업 1곳, 출자기관 4곳, 출연기관 21곳 중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강원신



박윤미 의원



원미희 의원



최재석 의원



류인출 의원



최종수 의원

원미희(비례) 의원은 “도 차원의 외국인 근로 전담부서를 신설해 계절 근로자뿐 아니라 상시적 인력수급 업무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된

용보증재단, 강원도립대학교, 강원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등 네 곳이다.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석(동해) 의원은 “국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를 기반으로, 발전소와 공장이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장거리 송전에 따른 거품을 걷어낼 때, 제조공장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업종의 유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을 두고 “과거 취약지역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사회환경 변화로 불가피하게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가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 용도 변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수(평창) 의원은 도내 지방소멸 대응기금 대상 지역 중 상위 평가 등급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시·군별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위등급을 받는 시·군에는 도비 교부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07 11 ()

03

“인사청문 기관 확대해야”

자치도의의회 5분 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윤미(더민주·원주) 도의원은 10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립대학, 강원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등 4곳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하고 있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문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직거래제,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을 주제로 발언에 나선 최재석(국힘·동해) 의원은 “한쪽에서는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 가동률을 낮춰야 하고, 한쪽에서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공장 가동을 고민한다면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미희(국힘·비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 현장 곳곳에 있지만 정작 영세 사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제안에 나선 최종수(국힘·평창) 의원은 “현행 시·군별 컨설팅을 강화해 양질의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류인출(더민주·원주)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또 이날 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무철(국힘·춘천)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박호균(국힘·강릉)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현정기자

2023 07 10 ()

亞洲經濟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해야"

전담부서 신설, 계절근로자 수급방식 변경, 특례 반영, 외국인노동자 지원 필요



원미희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미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불법체류 단속이 재개되면서 농번기 일손을 잃고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로 인한 농가피해와 불법체류자 양산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한 사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지자체의 전체 외국인 인력 수요 파악 부족, 계절근로자MOU체결 방식과 불법 중간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미희 의원은 “관리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전담부서 신설, 도와 계절근로자 송출국과의 직접 MOU 체결,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특례 반영, 외국인근로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지원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아주경제=(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cwu@ajunews.com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02

도의회 2기 예결위원장에 이무철 선임...부위원장 박호균

“도·정부 건축재정 낭비성 예산 삭감”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무철(춘천·사진)의원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박호균(강릉)의원이 맡았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과 13명 예결위원의 뜻을 잘 받들겠다. 열심히 하는 ‘화합의 위원회’가 되



면 좋겠다”며 “국가와 강원도 모두 건축재정 상황이다. 필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칼을 댄으로써 도민들에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자”고 밝혔다. 박호균 부위원장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자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다”며 “위원장을 잘 보필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 예결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무철 • 부위원장 박호균

• 위 원 (기재순= 상임위 순)
문관현·임미선·박관희·원미희·엄윤순·
박대현·박윤미(민)·지광천·양숙희·
이지영(민)·이영욱·김희철·조성운

▶ 총 15명 (국민의힘 13·더불어민주당 2)

지 활동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한다. 이설화

강원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무철 도의원

부위원장엔 박호균 도의원 선임..."재정 파수꾼 역할 충실"



제11대 강원도의회 제2기 예결특위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이무철(춘천4)·박호균 의원(강릉1)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제11대 도의회 제2기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등 15명으로 이뤄졌다.

이무철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 구성된 예결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영광스럽지만, 어깨가 무겁다"며 "권한과 특례가 강화된 만큼 재정 파수꾼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집행부와 협치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치하면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낭비는 확실히 견제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루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기 예결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등을 심사한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강원도 예산은 8조553억원, 교육청 예산은 4조3천946억원이다.

conanys@yna.co.kr

2023 07 10 ()



‘전기 자동차’ 화재 급증...“강원형 진압 대책 개발”



[앵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그만큼 전기차 화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의회가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는가 싶더니, 금세 지하주차장 전체에 연기가 짙어칩니다.

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는 데는 한 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8년 5만 5천 대에서 지난해에는 38만 9천 대로 7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는 2건에서 44건으로 22배 증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의회가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밀폐된 팩에 쌓여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화재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 "(배터리) 열폭주가 일어나면 지속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가연성 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산소를 차단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화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요."]

현재 전기차 화재 진압은 차를 통째로 물에 담가서 끄는 수조 진화 방식이 최선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수조 설치와 물 공급이 어려운 기둥 구조의 '필로티' 건물이나 지하주차장이 특히 위험합니다.

[문진영/강원도 소방본부 화재조사분석팀장 : "건축물에 주는 하중이 커 가지고, 안에 있는 철근이나 이런 게 다 녹을 수 있어 가지고, 나중에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금지나 방염막 설치 의무화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인재/강원도 산업국장 :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에서 충전을 할 때 화재가 발생하면 그때는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강원도와 도의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강원도형 전기차 화재 진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송승룡

2023 07 10 ()

KBS 춘천

‘의사상자’ 지원 조례 발의...위로금 최고 3천만 원



강원도의회 이지영, 박대현 의원이 최근, 정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해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 유족에게는 특별위로금 3천만 원을, 의상자에게는 최고 1,500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송승룡



2023 07 10 ()

강원도교육청, 특별법 3차 개정...교육 특례 발굴 속도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위한 교육 분야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 교육 특례를 구체화해 강원도의회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 전문가, 교사 등과도 논의해 중앙부처 대응 논리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만의 맞춤형 교육과 교육 자치권 확대, 교원 확충,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03

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총회를 갖고 고령친화도시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

회장 박윤미(원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사 이지영(비례·〃) 의원을 비롯해 최승순, 유순옥, 최종수, 진종호, 이한영, 박찬흥, 지광천, 최규만, 이영옥, 이승진 의원 등 12명이 활동한다.

이설화 lofi@kado.net

2023 07 10 ()

원통중·고등학교 청소년 명예자율방범대 창단!



인제군 북면남여자율방범대(대장 고진호, 유미영)는 7월 8일 원통종합복지타운 3층에서 원통중·고등학교 청소년 명예자율방범대 창단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과 김도형 의원, 이양수 국회의원, 엄윤순 도의원, 이경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함께 자리해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북면남여자율방범대는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 및 지역 내 안전이 필요한 점들을 찾아내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상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2023 07 10 ()

원주 MBC

방치된 드림랜드에 치유의 숲.. 과연 이번에는?

취재기자 권기만

◀ A N C ▶

원주 소초면 치악산에 있는 옛 드림랜드에
체험형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장기간 방치된 드림랜드 부지의 활용계획을
두고 그동안 말만 많았는데,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 N D ▶

◀ V C R ▶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옛 드림랜드입니다.

27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2015년 폐장 이후 8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이곳에 체험형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체 사업비 250억 원 가운데
강원도와 원주시가 각각 50억을
개발공사가 150억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동안 드라마세트장부터 펫시티,
소방안전 교육센터까지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나왔지만, 모두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 I N T ▶ 고흥열 이장/원주시 소초면 학곡1리
"답답한 것을 넘어서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한 번 지킨게 없습니다. 곳곳에
방치된 흔적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강원도의회가 해당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한 부분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옛 종축장의 경우 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개발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면,
드림랜드 부지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무상 임대하는 종축장과 달리
개발공사가 직접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에 있는 도유지에,
강원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타 시군의 반감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I N T ▶ 하석균 강원도의원 / 국민의힘
"도지사께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서 종축장
부지하고는 다르게 계획을"

여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한 뜻으로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 I N T ▶ 류인출 강원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 종축장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공유재산인 드림랜드가
강원도개발공사로 또 현물 출자 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원주시와 강원도 개발공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우리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주에
있는 도유지가 잇따라 출자되고 있는 상황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드림랜드가 제2의 종축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s/u)"드라마세트장을 짓겠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소방학교를 짓겠다"는
그동안 말만 많았던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활용계획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01

“사고만 나면 지자체 책임”...공직사회 피로감 심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

수영금지구역 물놀이 사고

법원, 지자체 손해배상 판결

강원 시·군 예산·인력 가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고가 민간 영역에서 지자체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어, 최근 법원이 수영금지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민간 영역의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책임을 졌다. 하지만 공공 영역까지 중대재해나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은 또 다른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양양에서 5명이 숨진 헬기 추락사고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당시 숨진 기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병선 속초시장·함명준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고소했

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첫 사례다.

이제는 수영금지구역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에도 지자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다대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피해 아동 유족이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고당시 숨진 A군은 지난 2019년 8월 10일 사하구가 개설한 다대포해수욕장의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법원은 해수욕장에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 표시가 희미했던 점 등을 들어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 60%를 인정했다.

해수욕장 운영에 돌입한 강원도내 지자체들은 고심이 깊다. 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최근 들어 미개장 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정식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다.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8년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관리청이 금지한 시간이나 장소 외에는 24시간 입수가 가능해져 해수욕장을 관리해야 하는 일선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진 상태다.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개장 전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수영금지구역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지자체를 향

하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 분야는 물론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부서 등 많은 부서가 중대재해법에 적용될 부분들이 많아 공직사회 내부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수욕장도 개장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사전에 예방 조치를 했는지부터 시작해 대부분 책임이 지자체나 지자체 공무원을 향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朝鮮日報

2023 07 11 ()

12

피서철인데... 동해안에 상어 출몰 잇따라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경계령

온난화 영향 남해서 활동 영역 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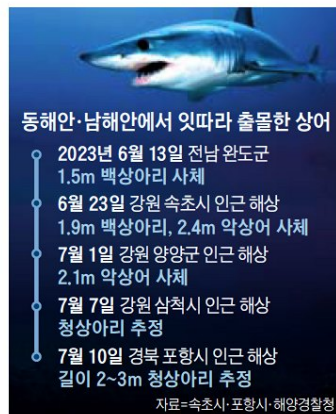
포항, 해수욕장 6곳에 전기 퇴치기

속초에선 침입 막는 그물망 설치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입구엔 '상어 피해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 요령' 이라고 적힌 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상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물놀이와 어업 활동 등을 금지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람을 공격하는 백상아리의 특징 등도 적어 놔다. 해안에서 600m 거리의 바다에는 그물망을 설치해 상어가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속초시는 해수욕장에서 주기적으로 "상어 출몰을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을 한다. 자녀와 이곳을 찾은 박모(41)씨는 "아이들과 바다에 들어갔는데 노란색 그물망에 접근하면 안전 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었다"며 "최근 동해안에 상어들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근 상어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 온난화로 한반도 주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따뜻한 바다에 서식 하던 종들이 동해안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영화 '조스'에 나온 백상아리가 죽은 채 발견된 데 이어 청상아리가 살아서 헤엄치는 모습도 동해안에서 목격됐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그물망을 설치하고 전기 충격기를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울여름 들어 강원도 양양·속초·삼척과 경북 포항 등에서 상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6월 하순 속초 인근 해상에선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2m에 가까운 백상아리와 악상어 시체가 각각 걸렸다. 이달 초 양양에서는 악상어, 삼척·포항



에선 청상아리가 각각 발견됐다.

백상아리·청상아리·악상어 중 악상어는 원래 동해에 살던 종이다. 수심이 깊고 수온은 낮은 바닷물에 살기 때문에 조업 중 사체가 그물에 걸려 올라온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해안가로는 잘 올라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할 일이 거의 없고,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없다. 청상아리도 깊은 바닷속에 살면서 주로 오징어나 큰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백상아리다. 바다표범 같은 포유류를 잡아먹는 백상아리는 수심이 얕은 해안가까지 다가와 먹이를 사냥한다. 공격성이 강해 사람을 보면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다. 백상아리는 새끼 시절엔 주로 큰 물고기를 먹고 살아가다가 크기가 250~300cm 이상으로 자라면 포유류를 잡아먹기 시작한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7건이 보고됐는데 모두 백상아리에게 당한 것이다. 공격받은 7명 중 6명이 사망했다. 백상아리는 따뜻한 바

다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전북 군산, 충남 보령, 인천 백령도 등 주로 서해·남해에서 발견됐었다. 그런데 이제는 동해안까지 진출한 것이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들은 상어 퇴치 대책을 세우고 있다. 포항은 15일 개장하는 도구·구룡포·영일대·월포·칠포·화진 등 지정 해수욕장 6곳에 '상어 퇴치기'를 1대씩 배치하고, 특수 교육을 받은 안전 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어 퇴치기는 상어에게 강한 전류를 쏘아 쫓아내는 기구로, 안전 요원들이 순찰할 때 타는 수상오토바이에 장착할 예정이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는 "백상아리는 20~30년 전만 해도 동해안 포항 위쪽에선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어종이었다"며 "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상어들이 해수온 상승에 따라 점차 올라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상현 기자, 속초=오유진 기자

2023 07 11 ()

01

江原日報

내년 1조2천억대 발주 강원 건설업 훈풍 예고

원주국토청 11개 도로 사업
매월 최대 4천억 예산 풀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024년 하반기 1조2,000억원대의 도로 건설 공사가 발주된다. SOC사업 축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제5차 국도·국지도(국가지방도로) 계획에 포함된 물량 중 1조2,038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을 내년 하반기 발주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 4차로 확장을 비롯해 국도 6호선 평창 진부~강릉 연곡 구간, 국도 56호선 철원 근남~화천 상서 구간, 춘천 사북~오탄 구간, 국도 31호선 인제 상남~기린 구간,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구간의 선형개량사업 등이다. 제천 봉양~원주 신림까지 10.67km 구간의 4차로 확장 공사에는 총사업비 1,798억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권과의 접

노선명	사업명	연장(km)	사업비(억원)
계	11건	78.89	12,038
국도 5	제천 봉양~원주 신림	10.67	1,798
국도 31	인제 상남~기린	11.4	1,615
국도 56	철원 근남~화천 상서	9.06	1,747
국도 31	평창 노동~홍천 자운	4.18	970
국도 6	평창 진부~강릉 연곡	15.82	2,691
국지도 82	영월 주천~주천~판문	8.42	709
국도 56	춘천 사북~오탄~오탄	1.43	375
국지도 88	영월 주천~한반도	6.1	480
국도 35	정선 임계~강릉 왕산	6.3	972
국도 56	홍천 화촌~군업~장평	2.41	494
국도 75	화천 사내~광덕~사창	3.1	187

자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성이 더욱 향상된다.

국도 6호선 평창 진부~강릉 연곡 구간(15.82km) 선형개량사업은 사업비 2,691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국도 56호선은 철원 근남~화천 상서 구간(9.06km·1,747억원)과 춘천 사북~오탄 구간(1.43km·375억원), 국도 31호선은 인제 상남~기린 구간(11.4km·1,615억원)과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구간(4.18km·970억원)에서 공사가 추진된다. **허남윤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07 11 ()
02

내년 1조2천억대 발주 강원 건설업 훈풍 예고 -1면에서 계속

국도 35호선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6.3km·972억원)과 국도 56호선 홍천 화촌 군업~장평 구간(2.41km·494억원), 국도 75호선 화천 사내 광덕~사창 구간(3.1km·187억원)은 이달 중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국가지방지원도로 건설사업도 주목된다. 국지도 82호선 영월 주천~관운 구간(8.42km·709억원)과 국지도 88호선 영월 주천~한반도 구간(6.1km·480억원)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한창이다.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도 59호선 강릉 연곡~양양 현북 구간은 연내 발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턱키 발주로 진행됐으나 낮은 사업비 탓에 유찰된 제2경춘국

도는 올해 분리발주로 재추진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월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강원자치도에 풀리게 된다”며 “지역경제에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 07 11 ()
04

매년 수천명 떠나는데 전담 부서 없는 강원

기획 / 길도는 청년 정책 -(상) 비효율적 행정체계

지방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별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 본보는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강원도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인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매년 수천명의 청년이 강원도를 떠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에는 이를 막을 전담 부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인구 이탈 방지,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강원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순유출된 20대, 30대 인구는 연평균 4,127명이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만 대안 마련을 전담할 강원특별자치도청의 부서는 일자리과 산하 '청년지원팀(직원수 5명)'이 전부다.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담당관(과)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강원자치도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지만, 전담 부서가 없는 상태로 정책 추진 부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다. 청년 상인은 경제정책과, 청년 창업가는 일자리과, 가족돌봄청년은 복지정책과, 청년농업인은 농정과 등이 맡고 있는

식이다. 청년이 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보건의료까지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강원도는 종합 지원이 어려운 구조다.

전남의 경우 인구청년정책관 산하

유입 확대 정책 부서별로 흩어져
일자리·주거 등 종합 지원 어려워
도 제외 16개 시·도 담당관 운영

에 인구정책팀, 청년지원팀, 귀농귀촌지원팀뿐만 아니라 출산지원팀까지 두고 있다.

누구보다 종합 지원이 절실한 이들은 '농촌 청년'들이다.

홍천에서 청년 마을인 '와쌌 타운'을 운영 중인 김성훈(29)씨가 2년 전 사업을 시작하며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교통, 공간 인프라 부족 문제였

다. 외지 청년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해도 사무실 및 숙박 공간이 부족했고 폐가를 활용했다. 직원들의 주거 공간 마련도 문제였다. 김씨는 "대중교통도 제한적으로 운영돼 방문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창업 자금 등의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부처별로 마련된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정책 전담 부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이규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07

“춘천시 르네상스사업단 운영실태 감사 부실”

시의회 특별위 첫 회의서 지적
재정상 조치 등 예산 회수 강조
업체선정 하자 사업 중지 촉구
시 “미완료 부분 이행 시정명령”

속보=춘천시가 원도심 르네상스사업단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종료(본지 7월 10일자 10면 등)한 가운데 10일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춘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춘천시의회 원도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사진)는 이날 춘천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경제정책과, 전략산업과에 사업단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



춘천시의회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10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숙경 시의원은 감사담당관실에 “본 감사의 핵심은 재정상 조치, 즉 위법하게 집행된 예산 회수가 우선이다. 또한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지체기간에 대해선 시가 업체에 배상금까지 물려야 할 판”이라며 “춘천시 감사결과과는 위법한 용역수행이나 업무관련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로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위원장도 “감사실에서 모든 상황을 원점에서 들여다봤는데 부당한 준공이

라더라도 준공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애가 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적절하게 용역 준공이 된 점은 있지만 이미 준공 처리가 된 부분이고, 감사 상황에서 업체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이행이 안 되고 어디까지 완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짓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이행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고 해명했다.

업체 선정 과정부터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갑 시의원은 “업체 선정 당시 두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해당 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한 A업체가 사업 입찰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업체에게 ‘용역에 참여했으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회의록 내용까지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업체 선정과정부터 있었던 것이다. 일단 모든 사업단 내 사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희영 시의원은 “진흥원에서 애초에 용역기간 동안 완수할 수 없는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무리한 점이 있어서 류가 지금 다 허위로 보고된 것”이라고 질었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배 시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용갑 시의원이 선임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11일 춘천시청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12

횡성군·미 유통사 손잡고 수출시장 개척

군가공식품수출협·승원유통
미국서 3자간 수출입 MOU 체결
지속적 수출창구 조성 협력

횡성군과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현지 유통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횡성군과 횡성군가공식품수출협의회(회장 유재주)는 지난 8일 미국 매릴랜드에 위치한 롯데프라자에서 마켓 특판행사를 지원한 후 승원유통(대표이사 Alvin Lee)과 3자간 수출입 관련 MOU를 체결했다.



김명기 횡성군수와 유재주 횡성군가공식품수출협의회장, Alvin Lee 승원유통 대표이사는 최근 미국 매릴랜드에 위치한 롯데프라자에서 수출입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승원유통과 횡성지역가공식품 중소기업들은 판로개척을 비롯해 지속적인 수출창구를 만들어 상호협력기로 했다. 또 김명기 군

수는 이날 하워드 카운티 시장을 만나 수출을 비롯한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횡성군가공식품협의회 소속 7개 기업

(청아굿푸드, 엔초이스, 횡성농협, 산애찬, 횡성맛, 하심정, 푸른디딤)이 동행했으며, 이들 기업들은 미국 서부 LA로 이동해 홈쇼퍼월드 특판행사, 다이아몬드바 한남제인에서의 특판행사 지원과 라디오코리아 방송 인터뷰, 장터USA와 MOU 체결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특판행사와 MOU 체결은 상호 간 동반성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한 뜻깊은 자리다”며 “단순한 이벤트성 협력이 아닌, 장기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우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 19

원주아카데미극장 시민 뜻 물어야

-갈등 장기화 조짐 ... 대토론회·여론 조사 필요

1960년대 지어진 원주 아카데미극장의 철거 문제를 놓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철거 예산안이 원주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찬반 대립은 여전합니다. 더구나 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이라서 시민들의 우려가 큼니다. 원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였는데, 극장 존폐 문제로 지역 역량을 소모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 계획대로 철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화합을 위해 원만한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와 녹색당은 최근 원주시의회의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혁성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중 전기이탈기로 자기 머리카락을 깎는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명분 없는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 진영으로 갈려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철거와 보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극장은 지역의 공

동체 문화·역사가 축적된 건축물로 문화 콘텐츠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관광명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가치가 미미하고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극장을 헐고 주차장 등 상권 활성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국회에서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끄니다. 동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공감하는 의사를 전달해 향후 철거 방침을 세운 원주시와 의견 절충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원주아카데미극장 처리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행여 논란이 커져 시민 간 갈등으로 확산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나 시민 사회단체뿐 아니라 원주시민 전체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토론의 장을 마련해 양측 주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시민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여론 조사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지역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 19

수산물 판매 어려움 심상찮아 우려

-원전오염수 피해가시화내수부진 겹쳐 악화안 되도록

여름철 관광객으로 번잡해야할 동해안 수산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사건이 부각되면서 벌써 수산물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오염수가 일시 방류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30년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녀에게 수산물을 먹이지 않겠다는 부모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칫 수산물 판매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내수부진 현상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강원지역 492개 업체의 응답을 토대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도소매업과 같은 비제조업분야의 매출·채산성·자금사정 BSI 6월 실적 모두 하락했습니다. 제조업분야 역시 6월 중매출 BSI 실적은 전월보다 5p 하락했고 신규수주 BSI 역시 7p 떨어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업주들은 경영 어려움으로 내수부진을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비제조업분야의 경우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좀더 어렵긴 하지만 29.6%가 내수부진을 꼽았습니다. 제조업분야에서는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여

기에 새마을금고 발 대량예금 인출사태가 정부의 대책 발표로 진정되기는 했지만, 금융불안 여지는 있습니다. 작년부터 높은 대출이자로 인해 연체율과 악성 가계대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비 심리를 위축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지 않는 사이에 현지 수산물 판매 저조현상이 나타나고, 내수부진이 겹치면서 도내 실물경제 상황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어제(7월 10일) “어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라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멀리부산까지 시료를 운반해 분석결과를 얻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활어 판매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계속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망이 제각각인 가운데 최근 동해안의 빈번한 상어 출현에서 보여주듯 해양생태는 늘 변동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맞춰 사회현상도 달리 해왔기에 세계 유일무이한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 의제에 바다를 접한 강원지역사회는 더 민감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7 11 ()

/ 19

속초~고성 고속도, 동해안 대동맥의 완성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속초~고성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직전 단계로 사실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업은 영동 북부권 최대 현안이자 25년 숙원사업인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지난해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됐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중점사업에 밀려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적극적으로 담기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전타당성 조사에 1년이 걸린다. 강원자치도는 연내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로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칠 경우 내년에는 예타 조사가 시작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동해고속도로는 속초를 경계로 끝난다. 더 북쪽인 고성군 지역으로 가려면 국도 7호선을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비해 구불구불하고 소요 시간도 길다 보니 주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서울~춘천~양양고속도로와 연계성 확보를 통한 접경

지역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인프라다. 고성~속초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서울에서 고성까지 2시간 대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관광객의 쾌적하고 빠른 교통 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고성지역 등 동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고성~속초 고속도로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사업성과 경제성은 다른 SOC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25년 전인 1998년 기본설계를 마쳤을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속초와 고성의 관광수요 등이 급증했다. 또 서울~양양고속도로는 물론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고성 제2 동해 북부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속도로가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경제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앞으로 북한지역을 지나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꿈의 아시아 하이웨이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동해고속도로는 동해안을 동북아 물류산업기지, 관광산업기지, 해양산업기지로 만들고 항만과 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동맥이다. 더는 동해고속도로 완성을 머뭇대선 안 된다.

江原日報

2023 07 11 ()
/ 19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양극화 해소 성과를 내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활동하게 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취임 직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

했다.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종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을 늘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을 높여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는 계층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 화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하위 빈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근대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격차다. 여러 양극화 과제 중에서 지역의 쇠퇴는 심각하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1%가 밀집해 있다. 기업의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상위 1,000대

기업의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실정에 지금처럼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2050년쯤에는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사정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주택·교통난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제 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생산의 쇠퇴와 활력의 저하는 소

득 감소로 인재 유출,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란 악순환을 초래해 ‘유령도시’로 전락시킨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 부의 집중

국가균형발전·지방자치분권위원회 통합

앞으로 5년 활동, 지역·계층 통합에 나설 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 더욱 심해지며 계층 이동은 점차 어려워지는 계층고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개전의 용이 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높은 열망에 비해 기회가 적어지고 계층간 벽도 두꺼워져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담보상태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300여개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사항이다. 공공기관 2차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 성향에 따라 좋은 정책에도 꼬리표를 붙여 찬반을 가르는 행태에서 벗어나 정치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